

COVID-19 팬데믹과 전체주의의 위험성

최재욱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회 위원장
shine@korea.ac.kr



“And once the storm is over, you won’t remember how you made it through, how you managed to survive. You won’t even be sure, whether the storm is really over. But one thing is certain. When you come out of the storm, you won’t be the same person who walked in. That’s what this storm’s all about.”

— Haruki Murakami, *Kafka on the Shore*

들어가며

우리 세대는 그동안 경험하여 보지 못한 새로운 위기를 겪고 있다. 궁극적으로 코로나 19 감염병 유행의 위기는 멈출 것이고 우리는 극복해 낼 것이다. 그러나 향후 우리 사회와 의료계의 선택에 따라서 앞으로 의료계가 그리고 국민이 겪어야 할 의료 현실은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 영향력은 보건의료

체계뿐만 아니라, 경제, 정치, 그리고 문화 전반에 미칠 것이다. 따라서 신속하고 결단력 있게 대처해야 한다. 눈앞에 닥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 위기가 지나간 뒤 우리가 직면하게 될 세상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디지털 권위주의’와 ‘감시 자본주의’의 등장

지난 1월 이후 취해진 코로나19 관련 다양한 정부의 방역 조치들과 의료 규제들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위기 상황의 본질적인 특성이자. 의과학적인 근거와 검토,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논의도 없이 정부 주도의 의료 규제와 강제 행정 명령들이 위기상황이라는 이유로 시행되고 있다. 의학적인 근거가 불분명하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인 조치들이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위험을 무릅쓰고 시행을 강요받고 있다. 환자와 국민이 대규모 실험에 사용되는 연구대상과 다름없는 상황이 아닌가? 앞으로 일반 진료는 원격의료로 보편화되고, 다수가 재택근무를 하고 의사소통은 원격으로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민간 의료자원과 의료인에게 국가동원령을 발동하거나, 국민의 개인정보와 의료정보 수집과 통제가 일상화되거나, 전체주의 공공의료 강화가 보편화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까? 평상시라면 정부나 의료계, 국민도 동의할 리 없겠지만, 지금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 문제이다. “디지털 권위주의(Digital Authoritarianism)”[1] 그리고 “감시 자본주의(Surveillance Capitalism)”[2]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다.

코로나 19 판데믹으로 촉발된 ‘디지털 권위주의’와 ‘Big Brother’ 대두

전염병을 막기 위해서는 전 국민이 특정 지침을 따를 필요가 있을 수 있는데, 정부는 감시를 통해서

규칙을 어기는 사람들을 처벌하게 된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사람을 항상 감시할 수 있는 기술이 오늘날 가능해졌다.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여러 국가들은 이미 이러한 새로운 감시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는 중국이다. 중국 정부는 사람들의 스마트폰을 강력하게 감시하고, 수억 개의 안면 인식 카메라를 활용하고 있다. 강제적으로 시민들에게 체온을 측정해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심지를 재빨리 확인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동선을 추적해 접촉자를 파악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전통적인 비디오 감시와 혁신적인 빅 데이터 분석 도구를 결합하여 14억 명의 시민을 감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히크비전 디지털 기술 회사(Hikvision)와 다화 기술 회사(Dahua Technology)는 중국의 광범위한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중국은 2020년 전국에 2억 대 이상의 카메라를 배치하고 있으며, 2021년 까지 약 5억 6천만 대의 카메라를 설치할 것이라 한다[3]. 인공지능(AI) 프로그램과 CCTV 정보의 통합을 통해 정부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중국 공산당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의 생의학적인 민감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즉, DNA 샘플, 지문, 음성 샘플 및 혈액형과 같은 개인의 생체 인식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실제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에 대한 휴먼라이츠워치(HRW)의 보고서는 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개인의 생체 인식 디지털 초상화를 구축하여 시민에 대한 더 많은 개인 정보를 수집하려는 의도”라고 밝히고 있다[1].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다. K방역의 성과로

내세우는 ‘추적과 감시(Tracing)’는 스마트폰 통신 기록, 개인 민감정보와 CCTV 정보의 광범위한 사용과 공개에 기반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가치가 훼손되고 정보 공개로 인한 차별과 낙인효과는 인권 침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국민은 알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동아시아 국가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국가안보 기관이 테러범과 싸울 때만 사용하는 감시 기술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 추적에 사용하도록 승인한 바 있다. 이스라엘 국회의 관련 분과위원회가 이에 대한 승인을 거부했지만, 이스라엘 총리는 “긴급 명령권”을 사용하여 이를 관철했다[4].

코로나 종식 이후 권위주의 정부와 다국적 ICT 기업들의 정보 확보와 통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바로 스마트폰을 클릭하는 손가락에서 측정된 체온과 혈압과 같은 개인생체정보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원격의료의 공공화’라는 탈을 쓰고 나타날 것이다.

305억 달러 규모(지난해 기준)의 전 세계 원격의료 시장은 연평균 14.7%의 성장률을 보이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 규제에 막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주장들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실제 공공연히 “소를 다 잃기 전에 외양간부터 고쳐야 한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실상 원격의료 기술을 다투는 ‘실험’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중국은 알리페이, 바이두 등 총 11개 업체가 참여해 ‘온라인 의사 상담 플랫폼’을 구축하기도 했다. 이 중 최대 사용자 보유 플랫폼인 핑안굿닥터는 코로나 19 이전 대비 회원수가 10배 증가해 총 11억1,000만 명이 이용했다[5]. 일본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다이아몬드프린세스호 크루즈 승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의료진 상담, 필요 약물 요청 등의 서비스 제공했다. 또 라인헬스케어 등을 이용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원격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원격의료 서비스를 활성화했다[6]. 일본은 1997년 특정질환과 지역을 대상으로 원격진료를 허용한 이후 2015년 대상 제한을 없앴고, 2018년부터는 원격진료가 건강보험에 포함되는 등 확산 추세다.

‘권위주의 감시체계’와 ‘전체주의 공공의료’

감시 기술은 무서운 속도로 발달하고 있다. 하루 24시간 체온과 심박수를 측정하는 생체정보 측정 시계를 모든 시민이 착용하도록 강요하는 정부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수집된 정보들을 이용하여 몸이 아픈 사람을 본인보다 더 빨리 알아내고, 그 사람이 어디에 갔었는지, 그리고 누구를 만났는지도 알게 된다. 그 결과, 감염병 확산과 그 고리를 손쉽게 차단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사용의 효과는 새로운 감시 시스템에 그릇된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개인이 특정 뉴스의 링크를 클릭했다는 사실을 알면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과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더 나아가 특정 비디오를 시청하는 사람의 체온과 혈압, 그리고 심박수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장면에서 웃고, 울고, 화를 내는지까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권위주의 정부와 기업이 사람들의 생체측정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하면 본인보다 그 사람을 더 잘 알게 되는데, 이러한 정보를 이용해서 특정인의 감정을 예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감정을 조정

하여 경제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030년에 특정 독재 국가 예를 들어 북한 주민들이 24시간 생체정보 측정 시계를 모두 착용한다고 상상해보자. 만약 정치 집회에서 지도자의 연설을 듣던 사람의 생체 정보 측정 장치가 분노 징후를 포착한다면 현장에서 체포될 것이다. 지나친 기우에 불과할까?

코로나 19가 종식되더라도 전체주의 정부는 새로운 감염병의 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나 동남아시아에서 변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났다는 이유 등을 들어 상시 감염병 감시체제와 생체측정 감시 시스템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국민 역시 코로나 19 사태의 피로감으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와 (건강보호를 위한) 상시감시체제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대부분이 상시감시체제 즉 건강 보호를 선택할 수도 있다.

디지털 권위주의와 전체주의 위험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개인정보보호와 권위주의적 감시체제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그러한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대부분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우리는 개인정보보호와 건강을 모두 누릴 권리가 있다. 따라서 전체주의적 감시체제를 도입하는 방법 대신, 국민과 전문가들에게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건강을 보호하고 감염병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을 준비 할 수 있다. 국민에게 과학적 사실을 전달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리는 전문가 집단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있다면, 빅 브라

더(Big Brother)가 시민을 감시하지 않고도 이들의 올바른 행동을 끌어낼 수 있다.

마스크 착용을 예로 들어보자. 지금은 당연한 것이지만 메르스 사태부터 코로나 19 감염 초기에 이르기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기 중 전파 가능성과 마스크 착용에 관하여 전문가와 국민의 판단과 행동은 정부보다 앞서 있었다. 권위주의와 책임회피 행정주의에 물든 일부 보건 당국과 세계보건기구는 공기 전파 가능성과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잘못된 마스크 지침을 고집하였던 것은 교훈으로 삼아야 할 사례이다[7][8]. 오늘날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매일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마스크 사용을 감시당하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과학적 사실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감시가 아니라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뢰가 필요하다. 국민이 의료전문가를 신뢰하고, 방역 당국을 신뢰할 때 가능한 것이다.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일부 정치인들이 의료계, 방역 당국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켰다. 방역의 정치화가 그것이다[9]. 그리고 지금 이 무책임한 정치인과 권력 집단이 국민과 의료계를 분열시키고 권위주의로 전체주의 의료를 택하려 할지도 모른다.

권위주의적 감시체제와 전체주의 의료체제를 저지하기 위하여 개방성, 투명성 및 인권 보호를 포함한 법치주의에 따라 디지털 도메인에 대한 국제 거버넌스 표준 채택과 국제민간기구와 디지털권리 진흥기금을 설립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1]. 그리고 의료계와 국민, 방역당국과 더 나아가 언론이 상호 신뢰와 연대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새로운 감시 기술을 활용해야 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도, 국민과 의료전문가에게 통제의 권한

을 부여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체온과 혈압 등 생체 정보를 측정하고 감시하는 것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의료전문가와 국민의 합의에 의하여 사용되어야 한다[10]. 이러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무소불위의 정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국민이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하고, 정부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전제 하에서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

자신의 감염 여부와 건강 상태를 24시간 스스로 추적할 수 있다면,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건강이 위험해 질 수 있는지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떤 습관이 그러한 건강 상태의 원인이 되었는지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신뢰할 만한 자료와 통계를 이용하고 분석할 수 있다면, 정부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바른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지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을 감시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하는 바로 그 감시 기술을 통해 개인도 정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만 한다.

과학적 근거에 대한 국민과 의료계의 신뢰와 연대를 반드시 구축

따라서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는 시민사회와 의료계의 역량을 시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시민 모두가 근거 없는 음모론과 정치적 이득을 바라는 정치인을 믿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다면, 권위주의적 감시체계가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무엇보다 소중한 자유를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여야 할 것 같다.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국민과 의료계가 굳건한 신뢰와 연대를 구축하고 과학적 근거 하에 판단과 결정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만일 의료계가 국민과 전문가들의 신뢰와 연대를 얻지 못한다면 이번 위기는 장기화될 뿐만 아니라, 권위주의적 감시체계와 전체주의 의료의 등장과 같은 더 비극적인 재앙이 초래될지도 모른다.

 참고문헌

- [1] THE NEW BIG BROTHER, China and Digital Authoritarianism, A Democratic Staff Report Prepared for the use of th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United States Senate, July 21, 2020.
- [2] Bessma Momani. After COVID-19, Will We Live in a Big Brother World?, June 1, 2020, Center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Innovation, Canada.
- [3] Amanda Lentino, "This Chinese Facial Recognition Start-Up Can Identify A Person in Seconds," CNBC, May 16, 2019; The Economist, "China: Facial Recognition and State Control," Oct. 24, 2018, <https://www.youtube.com/watch?v=IH2gMNRUuEY> (last visited Apr. 28, 2020)
- [4] Yuval Noah Harari: the world after coronavirus, Financial Times, March 20, 2020, <https://www.ft.com/content/19d90308-6858-11ea-a3c9-1fe6fedcca75>
- [5] 한국서 꼭 막힌 원격의료.. 매일경제, 12월 17일, 2020, <https://www.mk.co.kr/news/it/view/2020/12/1296779/>
- [6] 코로나 사태로 재점화된 원격의료, Economy Chosun, 3월 2일, 2020, http://economy.chosun.com/client/news/view.php?boardName=C03&t_num=13608521
- [7] Coronavirus : WHO rethinking how Covid 19 virus spreads in air. <https://www.bbc.com/news/world-53329946>
- [8] Dyani Lewis, Coronavirus in the air. Nature, vol.583, July 3, 2020, 510-513.
- [9] 최재욱, [시론] 방역에 정치적 고려를 왜하나? 조선일보, 2월 11일, 2020,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10/2020021003709.html
- [10] 최재욱, [시론] 통제·차별 만능에서 탈피, '인간 중심' 코로나 방역 해야, 중앙일보, 11월 10일, 2020. <https://news.joins.com/article/23916203>